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안 영 진**

A Review on the Geographical Studies of Developing Countries : Focusing on the German Context*

Ahn, Young-Jin**

요약 : 이 글은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관점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리학을 '해외지역연구'라는 지리학 특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실천적이고 응용적 연구 분야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온 독일어권을 사례로 하였다. 이 글은 먼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흐름을 개관하고, 이어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개발이론의 패러다임과 함께 개발전략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지리학적 개발도상국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과 의의 및 핵심 주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지리학이 세계화와 국제적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연구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 분야로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요어 : 독일, 지리학, 개발도상국의 지리학, 지리학적 (저)개발연구

Abstract : This paper reviews geographical researches on developing countries and suggests relevant future topics. The German language region is especially chosen, because it has a lot of outcomes in the field of geographical researches o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first reviews the history of geographical researches on developing countries, next analyze various trends of development strateg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aradigms of development theories, and finally tries to describe research approaches, significant meanings of the research, and essential topics on the research. The aim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geography of developing countries as a practical academic field and to remind the importance of the geography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could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and succeed the tradition of regional studies a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continuously intensified.

Key Words : Germany, geography, geography of developing countries, geographical development research

1. 서 론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한국인들이 피랍되어 2명이 살해되고 21명은 43일 만에 풀려나 귀국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함께 큰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은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를 앞세운 종교 활동에 있으나,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민간차원의 해외봉사활동이라는 측면도 전혀 무시될 수 없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1991년 4월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실행하는 기관

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들 간의 우호 협력 관계와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현재 각종 인프라건설, 국내 초청연수, 개발조사, 해외봉사단 파견, 민간단체 지원, 해외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여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사안은 얼핏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

* 이 글은 2007년 한국지역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유익한 논평을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yjahn@chonnam.ac.kr)

을 수 있다. 그것은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제적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인 피랍사태와 관련한 각종 매체의 보도에서 외신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이나 정부의 미흡한 대처방식과 부족한 정보 그리고 타 문화권(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해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각종 협력사업이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부진하고 인색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¹⁾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가맹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각종 협력 사업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전문 인력의 참여 속에 수원국의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장애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전혀 없지 않다.

지리학은 해외연구라는 오랜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국가의 80%와 인구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지리학의 학술적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연구 분야인 동시에 지리학이 단순히 이론적 논구에 그치지 않고 응용적 관점에서 실천적 참여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Scholz, 2004: 11-12). 그리고 최근 들어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자체도 연구의 관점과 내용적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의 '개발도상국의 지리학'에서 점차 벗어나 지리학 내에서 독자적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아가는 '지리학적 개발연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Scholz, 2004). 오늘날 개도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다차원적·다규모적·학제적 접근을 지향하며, 또한 문제 지향적이고 이론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특히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지리학적 연구는 공간과 사회, 구조와 행위(주체)의 교차지대의 학문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위기와 갈등 관리의 문제에 관해 보

다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Bohle, 2007: 797).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연구도 활발한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과 관점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²⁾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권의 개도국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어서 개도국 연구에 있어서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므로, 그 동안의 개발이론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전략의 내용적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개도국 연구를 위한 지리학적 접근 방법과 주목해야 할 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리학이 세계화 및 국제적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연구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 분야로서 개도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2.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동향: ‘식민지리학’에서 ‘지리학적 개발연구’로

근대 지리학이 성립한 이래 해외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리학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도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고, 또한 그 동안 연구의 초점과 고찰 방법도 적잖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근대 지리학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일 지리학의 경우 넓게는 해외지역연구, 좁게는 식민지 및 제3세계 개도국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시기별로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발달과정을 거쳐 왔다(Scholz, 1985; Coy, 2000).

지리학 발달사를 살펴보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걸친 제국주의와 식민지시대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종 교역품과 교역로, 농수산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해외에 산재해 있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식민지리학’(Kolonialgeographie)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여타 서구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식

민지리학의 초점은 식민지 영토와 그 주민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맞춰졌다. 그 주된 시각은 유럽 중심주의에 고착되어 있었으며, 식민지의 사회문화적 발전상황에 대한 접근도 결정론적·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해 있었다. 물론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들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 후 해외 식민지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나치시대를 전후로 식민지리학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다시 대두하기도 했으나, 해외 식민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식민지리학의 역할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멸하였다(Coy, 2005: 732-3). 오히려 이 시기에 하우스하퍼(Haushofer)와 옵스트(Obst), 콜프(Kolb), 파사르게(Passarge), 자페(Sapper), 트롤(Troll), 바이벨(Waibel), 빌헬미(Wilhelmy) 등과 같은 학자들의 해외지역연구는 비록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지정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주제에 걸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자체 또는 수출을 진흥하고 각종 원료와 교통로를 개발하기 위해 국지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cholz, 2004: 2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 60년대를 거치면서

독일의 해외지역 및 개도국에 관한 연구는 지지의 틀 안에서 행해졌다. 지지적 접근이 시사하듯이, 이 시기에는 개별 국가와 개성 있는 경관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진 방법론적 도구를 통해 파악하는 통일적 접근 방법론이 우세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지지의 전범으로 간주 되곤 하는 개별 국가에 관해 예를 들어 보어헤르트(Borchert), 파이퍼(Pfeifer), 샤를라우(Scharlau), 슬체(Schultze), 지버스(Sievers), 울리히(Uhlig), 바이그트(Weigt), 비체(Wiche) 그리고 비르트(Wirth)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일련의 모노그래프(monograph)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Coy, 2005: 733). 이들 연구는 대개 해외지역에 관한 지지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개도국의 (개발)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당시 지리학 내의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저개발 현상이나 구조의 성립 및 이에 필요한 해결 가능성은 지지도식에 입각하여 고찰되었으며(Scholz, 2004: 27), 또한 로스토우(Rostow) 경제성장단계모델과 같이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이른바 ‘따라잡기’(catch-up)식 개발의 주류 개발정책을 따랐다. 자연히 당시의 지리학 연구는 개도국을 둘러싼 논의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적어도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독

표 1. 지리학적 개발도상국 연구의 발달

발달 단계	시기	주요 연구 내용
식민지리학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환경)결정론, 유럽 중심주의 - 영토 요구에 대한 지정학적 정당화 작업
지역지리학적 접근	1950~60년대	- 개성 있는 개별 경관에 관한 연구 - 지지 도식에 따른 모노그래프의 양산 - 이론적 접근: 문화대륙론과 임대자본주의론
문제지향적 개발도상국의 지리학	1960년대 이후	- (계량기법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유형 구분 - 농촌과 도시의 구조 및 과정 분석 - ‘만화적’ 개발에 관한 지역적 평가
이론에 기초한 지리학적 개발도상국 연구	1970년대 이후	- 사회과학적 개발이론의 수용(특히, 종속이론) - 국제적 중심부-주변부 구조의 공간적 적실성 - 구조적 이질성과 한계성의 공간적 적실성 분석
이론과 접근방법의 분화 및 응용지향적 연구	1980년대 이후	- 지역적 개발전략의 평가 - 비공식부문, 생존전략, 젠더 등 - 지역적 경제순환, 갈등, 공간이용상의 경쟁 - 재해연구, 취약성, 위기 극복 - 인간과 환경의 관계, 전통적 지식, 지속가능성 - 세계화와 지역화

출처: Coy(2005: 733)

자적 개념을 전개할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Scholz, 2004: 19). 이처럼 지지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에도 개별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을 뛰어넘어 사회의 개발 및 저개발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지리학적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특히 해외지역을 문화권의 특성을 포착하는 개념에 의거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포겔(Wittfogel)을 원용하여 구축한 보벡(Hans Bobek)의 ‘임대자본주의론’(Theorie der Rentenkapitalismus)과 콜프(Albert Kolb)의 ‘문화대륙론’(Kulturerdeite)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두 이론과 접근방법은 오늘 날까지 개도국에 관한 이론 지향적 지리학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를 거치면서 지지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리학 내의 개도국 연구가 예를 들어 만사르트(Manshard), 오트렘바(Otremba), 잔트너(Sandner) 등의 주도로 저개발의 원인과 개발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연구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 지향적 ‘개발도상국의 지리학’(Geographie der Entwicklungsländer)이 성립하였다. 이 연구 흐름은 당시 지리학에 도입된 계량분석을 활용하여 제3세계 농촌과 도시의 구조 및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정치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배경을 중심에 놓고, 이를 국가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폭넓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며, 해결책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 등이 개도국 연구의 일반적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개괄적으로 행해진 개도국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를 개발하여 정교한 지역구분을 시도하기도 했다(Coy, 2005: 734).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지리학 분야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와 함께 개도국에 관한 연구도 근본적 전환을 맞았다. 우선 지리학 내부에서는 지리학의 최종 목표로 여겨진 지지에 대한 비판이 1960년대 말에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래의 개도국 연구가 학문적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Scholz, 2004:

20-1). 이에 따라 일반 과학이론(신실증주의, 비판합리주의)적 접근방법이 지리학 내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한편, 지리학의 인접 학문으로의 문호 개방이 진행되었다. 인접 학문분야와 교류와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영향력 확대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비판적 개발이론을 내포한 사회학적·경제학적·정치학적 접근방법들이 지리학 연구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따라서 이론지향적 접근방법론의 옹호자들은 과거 지리학 연구에서 결여된 이론에 입각한 접근과 지리학의 전통적 접근방법에의 지나친 매몰 그리고 저개발의 원인과 그 극복 가능성에 관한 학제적 접근에 있어서 지리학 연구의 낮은 적설성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에 남미를 배경으로 성립한 종속이론(Dependenztheorie)은 지리학 연구에 커다란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블랭크(Blenck), 브롱거(Bronger), 뒤르(Dürr), 콜헤프(Kohlhepp), 뤼링(Lühring), 라우흐(Rauch), 샘프(Schamp), 솔츠(Scholz), 쉴링-칼레츠(Schilling-Kaletsch) 등과 같은 독일의 지리학자들은 ‘종속’(dependencia) 개념을 다양한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적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이론에 의거한 미시적 경험연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개도국의 하층민들이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여건 그리고 인구이동 등을 분석한 도시지리학 연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농촌과 관련해서는 종속이론이 농업이 보여주는 구조적 격차가 어떻게 지속되며, 근대화된 외부지향적 영농체계가 어떤 기형적 작용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권력에 바탕을 둔 국제체계에서 개별 국가의 불평등한 위상을 서술하고, 특히 정치사회학자인 갈퉁(J. Galtung)의 제국주의 이론과 구조적 폭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개도국의 공간적 불평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중심부-주변부모델(Zentrum-Peripherie-Modell)도 등장했다(Coy, 2005: 734-5). 이러한 학문적 논의와 함께 1970년대 독일 지리학계에서는 개도국에 관한 세미나와 각종 포럼이 빈번히 개최되었다. 그리고 개도국 및 그 개발과 관련된 교과목과 강좌들이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었고(예를 들어 초창기에는 함부르크, 괴팅겐, 보쿰, 본, 마부르크,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지리학부 등이었으며, 현재에는 이들

대학 외에 바이로이트와 에어랑겐대학 지리학부에도 개설되어 있다), 베를란 자유대학과 튀빙겐대학 지리학부에는 개발도상국 관련 학위과정까지 설치되었다(Scholz, 2004: 23).³⁾

이처럼 1970년대에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가 저개발(또는 저발전)을 거시적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유용성을 높여 준 사회과학이론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학문 내부의 혁신과정을 겪은 뒤, 1980년대부터는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접근에서 뚜렷한 분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3세계 자체가 문화과정을 거치면서 거대이론의 설명력이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더욱이 외부의 타 학문분야로부터 이론을 수입하거나 수용하는 데서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으나, 개발과 저개발을 둘러싼 논의에서 지리학 고유의 학문적 기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 설명이 평가 절하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접 학문과 같이 지리학도 '중범위이론'(Theorie mittlerer Reichweite)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진 학문 내부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개도국의 지극히 복잡한 면모를 보다 적확히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빌레펠트(Bielefeld)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정립한 '연계론적 접근방법'(Verflechtungsansatz)에 자극받아 지구와 지역 그리고 국지 간에 서로 연결된 행위차원이 지리학 연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학 연구도 제도 및 행위 주체와 관련한 복합적 척도 또는 다규모 연구(Multi-Ebenenforschung)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공간구조를 지역적·사회적 현상과 과정으로서 포착하고, 공간을 사회적 협의과정의 '장'(arena)이자 사회적 행위의 '무대'로서 이해하는 접근방법이 지리학적 개발연구에서 중요하게 부상했다. 이에 지리학 내의 여타 분과와 마찬가지로 공간과 사회, 공간과 발전, 구조와 인간행위 간에 인식론적으로 결코 파악하기 쉽지 않는 긴장관계가 행위지향적인 지리학적 개발연구의 중심에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Bohle, 2007: 800). 따라서 1980년대 이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内外의 방법론과 접근을 보다

정교화하며 각종 실천적 개발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개발의 관점을 변화시킨 슈퇴르(Stöhr)의 '상향식 지역개발론', 라우흐(Rauch)의 축적론, 슈미트-불펜(Schmidt-Wulffen)의 연계론, 발러(Waller)와 라우흐 등의 기초수요에 입각한 농촌개발론, 알프(Alff)와 노이부르거(Neuburger), 테킬베(Tekülwe) 등의 젠더론, 이브라힘(Ibrahim)과 만사르트, 멘싱(Menschling), 뉘서(Nüsser) 등의 경험적 경관 및 인간생태학적 환경연구, 코이(Coy)의 정치생태학적 접근, 볼레(Bohle)와 크뤼거(Krüger), 토뢰거(Tröger) 등의 취약성 원리와 주체적 행위론, 솔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분절적 발전 등을 들 수 있다(Scholz, 2004: 31).

최근 들어 독일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론적 설명요소가 보여주는 폭넓은 스펙트럼에 따라 비공식부문, 생존경제, 인간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취약성(Verwunderbarkeit), 인간과 환경의 관계, 세계화의 사회적·경제적·공간적 영향,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확대되어온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의 관심사를 잘 보여준다. 이것들은 또한 개도국에서 목하 판찰되는 현실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반영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오늘날 통일적인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를 언급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Coy, 2005: 735).

3. 개발도상국에 관한 개발 이론과 전략: 패러다임 변화의 개관

1) 개발이론

개도국 연구와 관련한 '개발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래서 개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한 논자의 시각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에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동안 크고 작은 이목을 끌어 온 개발이론의 핵심 내용을 위에서 언급한 지리학 연구의 동향과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설하고자 한다(Kreutzmann, 2002).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두 가지의 논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 하나는 이론이 개발과 저개발이라는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론이 개발과 저개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개발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거의 모든 이론의 공통점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개별 요인을 강조하거나, 이를 요인을 복합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Coy, 2005; Bohle, 2007).

우선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은 지난 1950년대 이후 개도국의 개발과 저개발을 설명하는데 주요 이론이자 서로 간에 대척점을 형성해 왔다(Scholz, 2004: 74-89).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사회경제적·정치적 발전 아래 강력히 자리 잡아 온 근대화이론은 저개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개발의 제도적 조건을 설명하는데 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경제성장론이자 사회변동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근대화이론은 전통적 부문과 근대적 부문의 병존으로 표현되는 한 국가의 이중적 성격을 저개발 혹은 저발전 사회의 주요 특성으로 진단하고, 저개발을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구학적 정체(停滯)로서 해석하며, 특히 개도국 내부의 구조적 결함 또는 전통으로 인하여 내생적 개발잠재력이 봉쇄된 결과로서 파악하였다. 이를 테면 전통적 행동패턴(개혁역량의 미약)과 사회문화구조(사회적 도약이나 신분상승기회가 제약된 인도의 카스트제도 등) 그리고 전래의 경제 및 공간구조(분절화된 정주취락 및 시장구조)가 서구 산업국들의 (발전)패턴이 보여주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저지하고 경제적 낙후와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요인은 당연히 개도국의 발전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들이다. 저개발의 극복은 곧 전통에 얹매인 가치관과 행동양식,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근대화하는 것을 뜻하고, 개발은 바로 하향적 확산과정(trickle-down-effect)을 통하여 사회의 근대화와 복지를 사실상 저절로 가져다주는 경제성장과 동일시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화이론을 주장하는 논자들에게는 근대 서구 산업사회의 모범이 ‘따라잡기식’ 개발의 목표로 여겨졌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비교 우위를 활용한 대외 교역의 확대가 개

발의 엔진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저개발국가의 저축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따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개발의 동력('big push')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근대화이론의 사고 틀은 개발원조라는 개념의 형성과 전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⁴⁾ 하지만 근대화이론은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첫째, 저발전의 내생적 원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식민지 경험에 따른 기형적 발전양상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직 (선진)산업국들의 발전과정만을 지향하고, 이에 의해 전통을 발전의 장애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근대화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여러 개발전략들은 사회적 불균등과 분배 측면을 부차적 요소로 파악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대개 실패로 끝난 점 등이다(Coy, 2005: 241).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향으로서 1960년대 남반구 국가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론과 프레비시(Raul Prebisch)가 제시한 교역조건(terms-of-trade)의 장기적 악화이론에 바탕을 둔 종속이론이 탄생하였다.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과 반대로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개도국을 지배력을 행사하는 중심부, 다시 말해 선진 산업국에 종속된 주변부로서 개념화하였다. 종속이론에서는 저개발을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곧 저개발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따른 종속적 저개발의 산물인 경제적·사회적·공간적 기형구조로서 설명하였다. 내생적 구조가 아닌 구조적 저개발에 의해 유발되는 개발의 봉쇄가 저개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국의 개발(또는 발전)과 후진국의 저개발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파악하였다(Scholz, 2004: 83).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서는 식민지적 착취와 약탈 메커니즘에 의한 개도국으로부터 자원의 유출과 불평등한 공간구조(예를 들어 착취당하는 주변부 농촌에서 중심지로 작동하고 있는 식민지 교두보), 그리고 소수의 부유한 승자와 다수의 빈곤한 패자를 가진 양극화된 사회구조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공식적 종속관계가 종식된 뒤에서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의 역동적 개발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종속이론

표 2. 개발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접근방법	시대 배경	저개발의 양상	주요 특성	개발의 목표
근대화이론	1950, 60년대: 전후 경제 봄	이중주의, 전통과 근대	내생적	만화적 개발
종속이론	1960, 70년대: 탈식 민지화, 남북 격차 확대	종속, 한계성, 구조적 이질성	외생적	자조
세계체제론	1970, 80년대: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지배	주변부 및 반주변부로의 세계적인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외생적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변동
국가계급이론·전략적 집단	1980년대: 개발독재의 지속	권력집단에 의한 개발의 봉쇄	내생적·제도적	내적인 개발 저애요인의 제거
중범위이론: 빌레펠트의 연계이론, 지역 특수적 이론	1980년대: 제3세계의 내적 분화	지역 특수적 성격의 부각과 분화	외생적·내생적	지역 특수적으로 정의
세계화이론	1990년대: 동서냉전의 해소, 경제적·문화적 세계화	주변화, 파편화	비특수적	세계체제의 형성

출처: Coy(2005: 740).

은 저개발이 이처럼 구조적 종속의 결과, 곧 개도국이 중심부를 규정하는 교역 및 권력구조에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속 국가들의 내부 과정은 구조적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즉 중심부의 교두보로서 작동하는 부문이 유일하게 개발의 추동력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하고 한계 부문을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저개발 국가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된 부문의 이해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종속이론의 신봉자들은 이러한 종속구조 속에서의 개발이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종속이론에서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잠정적 단절, 선택적 분리 그리고 자립적·내생적 강점과 잠재력을 지향한 개발과정만이 장기적으로 구조적 저개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뒤이어 나온 다양한 이론들은 이러한 종속이론의 설명원리와 요소들을 수용하며 계속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에 의해 제창된 세계체제론과 엘센한스(Hartmut Elsenhans)로 대표되는 국가계급이론(Staatsklassentheorie) 그리고 에버스(Hans-Dieter Evers)에 의한 전략집단이론(Theorie strategischer

Gruppen)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종속이론들도 그 동안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 비판은 다음과 같은 논점에 집중되어 왔다. 첫째, 저개발의 원인을 외생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내생적 요인과 그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담론의 방식이 지나치게 거시적이며, 따라서 제3세계 내에서 나타나는 현실의 다양한 개발양상과 부분적 진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째 전략적 구상이 너무 일반론적이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Coy, 2005: 741).

그런데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일찍부터 경험적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저개발의 성립과 저속이 내생적 요인(근대화이론) 또는 외생적 요인(종속이론)에 의해 일면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일반적으로 기형적 공간구조는 종종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기 이전의 사회 및 공간구조가 식민지 지배라는 목적에 수용되고, 식민지적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형태로 내생적 그리고 외생적 결정요소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은 일

반화의 수준이 너무 높으며 거시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그 설명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정책이나 전략이 특히 지구상의 최빈국들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 들어 지리학 연구에서는 '중범위이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제3세계 내에서 확대된 문화 또는 차별적 개발과정을 배경으로 더 이상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특유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저개발 또는 개발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회경제 현상(예를 들어 자급자족적 생산, 생존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지구적 차원에서의 격차의 심화와 달리 제3세계 내에서의 서로 다른 발전양상은 경제적 틈새시장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소규모 집단의 활동과 제도적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중간규모 차원에서 개발이론에 바탕을 둔 개발패턴에 대한 탐색이 지리학 연구에서 점차 개발 주체의 일상세계적 행위공간에 대한 미시적·소지역적 연구를 통해 이뤄지게 되었다(Kreutzmann, 2002).

근래에 와서 개발이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시화되고 있다(Scholz, 2004: 215-58). 세계화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거시적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때 개발이론에 관한 설명은 접근방법의 다원성이라는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의 개발이론을 더 이상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개발이론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문제영역을 뚜렷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첫째, 세계화의 작용방식과 영향에 관한 문제, 둘째 개발의 봉쇄에 대한 (특히 제도적) 배경과 개발 잠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셋째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의 조절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 등이다. 개별 이론과 접근방법 간에는 복잡한 연계관계와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논의되는 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종속이론처럼 때때로 너무 빠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제단에 희생양이 된 과거의 설명방식이 좀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지배적이었던 그리고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단일 차원은 저개발

과 개발을 설명하는데 다차원적 고찰방식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사회구조적·정치적·문화적 요인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Scholz, 2006; Rauch, 2009).

2) 개발전략

이제까지 논의한 개발이론은 정치적·개발계획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정치적 진보라는 목표에 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전략구상으로 귀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이론의 패러다임 전환과 나란히 개발전략의 변화도 주목된다. 각각의 지배적이거나 중심적 전략들은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개별 국가에서 정치적 목표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따라잡기식 개발을 목표로 삼은 근대화이론에 입각한 구상이 전략적 접근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는 그 귀결을 오늘날까지 많은 국가에서 추적할 수 있다. 역동적이라고 여겨진 특정 산업부문을 진흥시키는,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둔 경제적 개발전략이 중요시되었다. 이 따라잡기식 개발은 일차적으로 공업화를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대체와 수출지향 정책을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구사하는 전략이 큰 주목을 받았다. 수입대체를 통한 내국시장 지향적인 근대화는 곧 소비재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의 진흥을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보호주의 정책과 함께 국가부문의 주도적 개발을 추구하였다. 또한 갖가지 공간적 개발전략이 수반되었는데, 각종 인프라의 개선과 산업단지의 개발 그리고 성장거점의 육성 등이 추진되었다. 이에 반해 강력한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은 비교우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양호한 투자환경의 창출과 시장개방, 자유무역지구(수출자유구역)의 설치, 저임금 산업부문의 진흥 그리고 종종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등에 우선권을 두었다. 이때 전 세계에 걸친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식민지시대로부터 형성되어 온 공간적 불균등 또는 지역격차가 한층 더 심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공업을 지향한 개발전략은 도시 편향과 결국에는 도농간 격차의 심화로 연결되었다. 농업부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근대화 전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수확작물의 도입과 기계화, 관개 그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투입 등에 바탕을 둔 녹색혁명이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기초적 식량과 환금작물의 생산이 괄목할 만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회적·생태적 비용도 만만찮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따라잡기식 개발전략은 기대한 경제사회적 돌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 의존의 심화, 소득의 특정 지역 및 사회계층에의 집중, 한층 더 악화된 형태의 경제적·사회공간적 격차를 수반하기도 했다(Coy, 2005: 744).

근대화이론과 비교하여 종속이론은 주로 저발전을 초래하는 상위의 구조적 원인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출된 전략적 구상은 정치적 여건의 변화를 강조한 반면, 구체적인 개별 조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종속이론은 특히 구조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선진국과의) 선택적 단절과 분리를 필수불가결한 전략으로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당한 국제적 교역관계의 요구 속에 경제적 의미에서 가능한 다양화된 국내 시장의 육성이 자생적 개발전략으로 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자립이 정치적 권력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전향적 방편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자생적 개발전략은 대내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라는 현실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발의 전제로서 정치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눈을 돌리게 된 점은 종속이론에 따른 개발전략이 기여한 점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 절대적 빈곤의 퇴치와 기초수요의 충족 문제가 개발전략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는 1974년 코코옥(Cocoyoc) 선언과 1972년 캐나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맥나마라(R. McNamara)가 행한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적 개발정책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 또한 따라잡기식 개발전략이 사회발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해가 확산되면서 도출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과 개별 국가의 정치에서 강조된 개발전략은 직접적으로 현지사회를 지향하고, 구체적인 지역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간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각종 개발전략이나 사업들은 목표 집단을 명확히 하고 빈곤 문제를 지향하며, 특히 해당 집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특히 과거에 소홀히 다뤄졌던 농촌개발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때 농촌개발의 부분 조치가 아닌 농촌지역의 생활 및 생산조건의 포괄적 개선이 강조되었으며, 중심부에 근접한 공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위해 통합적 농촌개

표 3. 개발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개발전략	등장 시기	주요 요소	방향
근대화·만화적 개발	1950년대	- 공업화(수입대체, 수출지향) - 녹색혁명	부문별, 경제적, 성장 지향적
단절·분리	1970년대 전반	- 내국시장 개발 - 자조	정치적
기초수요 충족	1970년대 후반	- 빈곤 및 목적집단 지향, 참여 - 통합적 농촌개발	지역적, 사회적
구조조정에의 적응	1980년대	- 탈규제화, 유연화(민영화) - 가계 및 (공공)재정 위기의 해결	경제적
지속가능한 개발	1990년대	- 참여적 사회경제 개발 - 환경 및 자원보호	지역적, 생태적, 사회경제적
글로벌 거버넌스	1990년대	- 지구차원의 새로운 조절 형태와 레짐 (regime) 형성(월드 컨퍼런스)	지구적, 정치적

출처: Coy(2005: 742)

발 개념과 프리드만(J. Friedmann)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농도개발’(agropolitan development) 전략이 성립하였다. 이 두 전략은 기능적으로 외부지향적 공간개발과 달리 영역적이고 내생적 잠재력을 지향한 공간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과거의 하향식 개발전략을 전략적 전제와 실행조건 등의 측면에서 상향식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개발전략상의 과제로 등장하였다(Coy, 2005: 745).

1980년대는 많은 개도국들이 직면한 외채위기와 이것이 후진국의 개발에 미친 타격과 깊은 정체로 개도국의 개발전략에 관한 분석에서 종종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진다. 공공재정의 위기 속에 많은 국가들은 이런저런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반신반의하면서 추진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전에 구상되고 설정된 개발 목표가 적어도 국제적,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수사에서 사라진 정도는 아니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안정과 재정재건 그리고 민영화라는 경제적 목표는 신자유주의적 담론 속에서 때때로 파탄 직전에 있는 내국 시장의 동시적 개방아래 관철되었다. 각종 국제적 개발기구와 개별 국가의 정책 속에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규제완화와 유연화는 시장의 자기 회복력과 국가의 후퇴(각종 보조금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를 한층 더 신뢰하는 시대 흐름과 결합하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확립된 이러한 경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당시 미래 신용에 대한 기반으로서 설정한 구조적응프로그램(SAP)의 기조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오직 경제적 목표를 지향한 이들 정책은 인간의 생활여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고용·교육·보건·식량 확보 등의 부문에서도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작동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개발전략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개발전략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심 개념으로 재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미 1970, 80년대에 사회경제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의 생태적 한계로 말미암아 고려하고자 했던 생태적 개발(ecodevelopment) 개념이 개도국과 관련한 논의에 수용된 후, 이른바 브룬틀란트(Brundtland) 위원회의 보고서와 1992년 리우(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전략의 기조로서 관철되었다. 국제적(예를 들어 세계은행) 그리고 다자 또는 양자적 각종 개발기구들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개발을 각국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각종 정책에 최고의 목표로 격상시키기에 이르렀다. 개념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원을 절약하고 사회를 계속 유지하며, 이와 동시에 경제적 성장을 배제하지 않는 개발양식을 추구하면서도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사회정의, 문화적 정체성, 참여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이것들을 개발전략에 적절히 포함시키고자 했다. 물론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적 행동 대안이라기보다는 구두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비판론자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새 부대의 헌술’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된 개발 패러다임의 돌파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Rauch, 2009).

오늘날 개도국의 현실과 양극화되고 있는 세계화, 점점 확대되는 분열화에 비춰볼 때, 개발전략을 둘러싼 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동원하여 도약을 꿈꾸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한층 더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테면 1994년 멕시코의 외채위기와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아르헨티나 등이 겪은 심대한 정치경제적 불안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분절적 발전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경제적·공간적 문화의 전지구적 기본구조로 간주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속가능한 개발이 세계의 개발이념이 된다면, 그것은 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만큼이나 세계화의 파괴적 영향을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와 정부간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만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통과된 아젠다 21('Agenda 21')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행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이제까지는 주로 소수의 국가들만이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적 레짐(regime) 구조의 변화에 준비 부족과 개별 정부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구속력이 전략의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임정책에 대한 해답으로서, 1990년대에 적잖은 성과를 낳은 세계회의가 포럼을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점점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개발전략의 탐색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법칙만으로는 국제적 역학관계 속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조절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다시 말해 비정부기구도 환경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냐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Coy, 2005: 746).

4.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접근방법과 과제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독일의 지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폭넓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다(Scholz, 1985; Coy, 2000; Scholz, 2006). 그렇지만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가 향후 지리학 내의 건실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보다 굳건히 자리매김 되고 학문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론에 입각한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최근 들어 한층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독일 어권 지리학이 개도국 연구에 부여하는 의의와 기본적 접근차원과 방법 그리고 끝으로 핵심 주제 및 향후 과제영역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의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하

였듯이 지리학 고유의 해외지역연구라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합의를 지닌 응용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리학적 개발연구는 응용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다양한 차원에서 각종 개발정책과 세계 각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지리학적 개발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차원에서 정리될 수 있다(Scholz, 2004; Coy, 2005: 754-5).

우선, 국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공간적 구조와 과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각종 개발전략의 구상과 정책적 대응에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발협력과 공적원조 등의 지속적 작용과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주체의 행동논리와 행동여지를 규정하며, 따라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적 조치들의 장기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정치권력적·사회구조적 틀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지식을 요청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론에 뒷받침된 그리고 서로 다른 분석차원(후술할 거시적, 미시적 차원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은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의 의의와 활동분야는 개도국을 둘러싼 정치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론적·정책적 논의와 연계 아래 개도국의 개발과 저개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전략개발의 준거는 각종 개발전략의 구상을 국지적·지역적 여건과 각각의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생태적 조건에 알맞게 적용시키고, 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정도까지 참여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3세계 내지 후진국이 당면 현안과 각종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지리학이 관여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지역개발 전략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자연보호, 자원관리, 관광개발, 도시지구계획과 같은 특정한 측면을 거쳐 위기 극복 및 관리 문제에까지 걸쳐 있다. 이때 미시적 차원에서의 응용지향적 지리학 연구는 해결 전략의 적용조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전략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 평가를

주제로 삼고 있다. 셋째, 지리학은 개도국에 관한 각종 개발정책과 전략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평가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각종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 그리고 검토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체계 등이 개발협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차원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오늘날 각국의 대외 개발협력과 원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지리학은 개도국의 개발정책에 있어서 교육적 과제를 수행하고 충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위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인력, 특히 세계 각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지리학의 또 다른 교육적 기여는 목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점점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개도국에 대한 필수적 정보를 전달하고 중계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연대의식을 일깨우고 하나의 세계에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 간의 물이해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적대감 등을 해소하거나 축소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역할을 지리학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학문도 드물 것이다.

개도국과 그 개발정책에 관한 지리학의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리학자들이 학술적 그리고 실천적 논의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역적 문제 이해 능력'일 것이다(Scholz, 2006). 특정 공간과 지역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물론 개도국에 관한 연구가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대한 연구 등으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파편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학문 공동체에서 지리학의 역할은 이러한 전문적 지식과 그 활용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리학의 또 다른 강점이자 인접 학문에 크게 앞서는 두 번째 자산은 지리학이라는 학문 내 그리고 학제 간 교차연구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연과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고찰방법을 지리학 내에서

통합하고 종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오늘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지닌 폭발력과 관련하여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2) 접근 방법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먼저 최근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의 주요 특성을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개도국과 관련한 지리학적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방법론적 탐색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선 최근의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는 행위주체(Akteur)를 지향하는 성격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지리학 연구의 지향이 과거처럼 단순히 공간 자체가 아니라, 행위주체의 공간적 잠재력에 대한 지각과 활용 그리고 공간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두 번째로 주체의 행위(Handlung)를 관심의 초점에 놓고 있다는 점과 연결되고 있다(Krüger, 2003). 이러한 서로 다른 주체가 전개하는 행위의 논리가 개인적 배경과 요소로부터 뿐만 아니라 개인을 뛰어넘은 사회문화적·정치적 조건과 틀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최근 지리학 연구가 행위에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로 갈등문제(Konflikt)를 지향하는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갈등에 대한 접근은 공간이용을 둘러싼 경쟁이나 배제를 야기하는 권리관계의 작용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실천(Praxis)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리학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의 생활조건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적실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Coy, 2005: 755-6).

이상과 같이 지리학의 개도국에 관한 연구는 접근 방법과 분석의 초점에 파악되는 특성과 함께, 최근 들어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나 전통적 문제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연구

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 실태와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경제(산업생산, 무역, 고용 등) 및 사회(교육, 보건, 하부구조 등)적 제반 측면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국제적 개발기구(세계은행, UNDP, 기타 유엔 산하기구)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하여 빈곤과 개발의 결핍에 대한 지표상의 기준을 조작할 수 있으며, 지역간 비교와 아울러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지적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공간 수준에서의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공간적 변화가 빠르고, 더욱이 문제의 인과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질적·양적 기법의 원용 아래 광범위한 현지조사(답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부분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 지역격차나 공간이용을 들러싼 갈등,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변수와 변동 그리고 자원 파괴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경험적이고 미시적 분석이 긴요하며,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과정에 대한 지리학적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리학 연구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오늘날 타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다차원 혹은 다규모모델(Mehrebenenmodell)로 설명될 수 있다.

지리학에서는 보통 구체적 현장에서의 문제제기, 이른바 미시적 차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때 물론 개별 가구에서 출발하여 행위집단을 거쳐 한 지역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에서 중요한 전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 행위의 합리성을 가진 타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에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연구를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관심 주제가 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진단은 언제나 수평적 또는 횡적 관련성과 아울러 상위의 분석차원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중간 차원에서는 국가적 행위와 사회적 권력구조, 집단적 이해관계를,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지구적 영향과 지배적 담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지리학 연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메타(meta)차원도 강조되고 있다(Coy, 2005: 753-4). 개도국에 관한 이론화 작업과 개념구상, 그 공간적

적실성 등의 메타차원에서의 논의는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유도해 준다.

3) 주요 주제영역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의 과제와 함께 전망을 보여주는 여섯 가지 서로 다른, 하지만 상호 연결된 주제영역이 정립되고 있다(Coy, 2000; Kreutzmann, 2002; Coy, 2005: 756-60). 당연히 논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갖고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함께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도국의 지리학은 여타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국지적·지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화의 영향과 귀결, 즉 지구적-국지적 상호작용 내지 세방화 양상이 점점 더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승자와 패자, 내적인 사회공간적 변동(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탈규제화, 유연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역화의 잠재력, 새로운 공간패턴의 등장과 행위주체의 적응전략 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주제영역은 상이한 척도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적 관련성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회공간적 분절화(Fragmentierung)에 관한 연구와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3세계 (대)도시들에서 관찰되는 폐쇄적인 부유층의 계토와 한계지구 간의 점점 뚜렷한 양극화 양상, 서로 다른 생활양식의 전개, 공적 공간과 사적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 간의 분단 등이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내용에 속한다. 이 경우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를 배경으로 한 문제 영역의 관한 이론에 의거한 분석은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공간이용을 들러싼 갈등이 도시에서 특히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의 두 번째 주제영역은 생존전략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세계화의 귀결과 함께 내생적인 자연적·문화적 잠재력 또는 한계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이를 테면 자급자족 경제와 비공식부문

등이 분석의 범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도국의 도시들에서는 비공식 활동이 생존을 보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는 오늘날 제3세계 국가의 도시민의 50% 정도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비공식부문은 낮은 진입 장벽을 통해 종종 미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력에게 유일한 소득원을 제공해 주는데, 행상에서 비공식적 운송업, 기타 서비스업을 거쳐 소규모 비공식적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제3세계 도시들에서는 비공식부문에 의해 갖가지 갈등, 예를 들어 공적 공간의 무단점유와 비공식적 산업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데, 공식 부문과 비교하여 높은 적응력, 높은 노동력 흡수, 비교적 높은 성장 동태를 보여주는 한편, 불법과 불충분한 공공적 통제 그리고 통제 가능성의 전반적 결여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생존전략과 관련하여 지리학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차별(예를 들어 교육기회)과 각종 권리의 침해 또는 취약성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의 경제적 순환의 작동방식과 이에 따른 이해갈등과 공간이용을 둘러싼 경쟁 등이 1980년대 이후 지역차원의 생존전략 연구의 주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주제영역은 자연자원의 약탈, 부분별한 이용, 통제되지 않은 도시화에 따른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시아, 특히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국가에서의 산림파괴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원인의 분석(예를 들어 우발적 또는 조절된 농업 식민지화, 초기 개간, 화목 획득, 목재 채취 등)과 생태적·경제적 귀결(지구적·지역적 기후변동, 자원기반의 황폐화)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서 환경문제는 서로 다른 행위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자 동시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장소기반 행위자와 비장소기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정치생태학이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에 혁신적 접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종생태학적 분석은 실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통적인 국지적

지식체계의 실천적 의의를 지향하고 있다. 자원에의 접근(토지, 자연자원 일반, 소득 및 정치적 권력에의 접근 등)의 처분권적·제도적 조절이 이러한 주제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네 번째 주제영역은 재해를 포함한 각종 위험(risk)에 관한 연구로서, 이는 특히 식량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과 관련하여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발에 따른 재해, 인구성장,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의 결핍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대다수 인구가 식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테면 식량 부족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영양실조나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개인과 가구 그리고 집단의 각종 취약성은 구조적 조건과 개인적 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 집단들의 취약성과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이론에 의거한 인문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취약성의 접근이 포괄적인 생존가능성(livelihood)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Bohle, 2007: 806). 이 개념적 틀 안에는 생계유지체계라는 의미에서 가구의 존립을 규정하는 능력과 자원의 보유상태, 행위 등이 포괄적인 분석개념으로서 종합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본과 자연자본, 사회적 자본, 물적 자본, 재정자본의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물론 이 주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취약성이나 생존가능성의 접근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잖은 성과를 냉고 있지만, 왜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리우 세계 환경회의 이후 공식적으로 정치적 또는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된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도국이 직면한 현실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접근방법으로서 새로운 이념의 가능성과 아울러 한계를 둘러싼 수많은 지리학적 연구를 자극하였다. 이 경우 한편으로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의 긴장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 개발의 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이 이론적 차원과 함께 응용적 차원에서도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영

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여기서 지리학자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갈등영역과 그 지구적 연계관계 그리고 사회경제적·생태적 귀결에 관한 분석 등에 다양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학은 경제사회적·공간적 구조와 동태의 분석, 이해갈등과 공간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분석으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 변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학적 연구는 현황 분석을 넘어서서 장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미래의 사회공간적 발전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리학적 연구는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간의 긴장관계를 구체적인 경험적 내용으로 채우고, 지역적 경험의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 환경과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방향을 찾아내는데 토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의 과제와 관점은 예측의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이용, 빈곤, 불평등, 생활기회의 격차 등 현실적 이슈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세계화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Kreutzmann, 2002; Scholz, 2004; Rauch, 2009).

5. 결 론

독일어권의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해외 지역연구라는 오랜 전통을 계승하며 사회적 적실성을 지닌 응용지향적 연구 분야의 하나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화의 구조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학술적·실천적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확실히 개도국에 관한 지리학 연구는 과거보다 훨씬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토양침식이나 자연재해, 식량부족과 같은 전래의 지리학적 주제와 이슈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지리학적 개발 연구는 사회연구에 바탕을 둔 접근방법을 수용하면서도 문화의 재발견과 공간의 구성처럼 독자적인 연구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도국에 관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해 온 독일 지리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솔츠는 최근에 출간된 그의 저서 결론에서 개발도

상국에 대한 지리학 연구에 대한 미래의 도전으로서 무환경, 증가일로에 있는 다양한 갈등, 깨어질 수 있는 사회적·공간적 분리, 안정되지 않은 격동, 초국적 운동, 공공 안보와 지역정체성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체 없는 상실, 경쟁에 의해 제어되는 네트워크지역의 형성,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급진적 재홍 등을 지적하고 있다(Scholz, 2004: 259).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는 '위험과 갈등을 지향하는 횡단연구'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지향들이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위지향적인 사회과학적 접근방법과 문제지향적인 환경과학적 접근방법론의 결합, 위계적으로 연결된 세계적 행위 주체들의 관계와 다양한 차원의 생태계 간의 상호관련성과 작용을 지향하는 다규모적 분석, 국지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걸친 위기와 갈등과 분절화 과정에 대한 관심, 위기 및 갈등에 지속 가능한 관리에 초점을 둔 인간과 환경 체계에 대한 주목, 공간 또는 공간성 범주의 자연과 문화, 사회에 관한 구성주의적 개념과의 결합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과 기아, 지속가능성과 같은 이제까지의 도전에 더하여 위험, 갈등, 사회적·생태적 취약성, 분절화, 생존전략, 경계구분과 같은 새로운 문제영역을 눈을 돌리는 지리학적 개도국 연구는 공간과 공간성의 개념을 무엇보다도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지리학 연구에서 공간은 말하자면 생태적 그리고 사회적 과정의 장(arena)일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여러 관점에서 국면과 구조 전환의 사회적·정치적 도구(tools)이기도 하다. 이때 공간은 일차적으로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의 산물(products)로서, 분절화와 다원화의 원천(sources)으로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성물(konstructs), 즉 사회적·문화적·정치적으로 정당화되고 해석되며 상상된 공간인 것이다. 사회의 개발과정과 개발 문제의 맥락에서 공간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지리학 연구는 이제까지의 개도국 지리학에서 미래지향적인 지리학적 개발연구로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인류사회가 직면할 거대한 미래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일깨우는 분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주

- 1) 우리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는 3억6600만 달러(2003년)로 일인당 7.6달러이고, 국민총생산(GNI)의 0.06% 정도다. 이 규모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0.7%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인 0.25%의 약 1/4에 지나지 않는다.
- 2) 독일에서 개발도상국 연구는 '해외지역연구'(geographical research overseas)라는 형태로 하나의 학문적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으며(Wirth, 1988), 또한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각종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 3) 지리학부 및 개발도상국 관련 학위과정 졸업생들은 개발협력 및 원조 사업, 국가 및 초국적 개발기구, 비정부조직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리학자들도 관련 분야에서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평가, 자문, 그리고 직접적인 운영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olz, 2004: 23)
- 4) 다시 말해,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된 기술적·재정적·경제적 협력이라는 형태의 외부 지원을 통해서만 내부 역량을 동원하고 기존의 발전 잠재력을 교육적으로 도구화하고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을 자극하고 시장순환과 공업화를 시동하고 자원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민주화를 유도하며 전체 사회의 문화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Scholz, 2004: 81).
- 5)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50% 이상의 주민들이 비인간적인 생존조건 하의 한계적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거공간 문제와 폭력 그리고 급속한 도시팽창은 이와 동시에 도심의 쇠퇴와 심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층 더 증가할 메트로폴리스 혹은 메가시티(megacity)의 일상을 잘 표현해 준다. 이러한 배경 아래 통제 가능성의 문제와 국지적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수단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적 개발도상국 연구는 도시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도시 주체의 행위논리뿐만 아니라 응용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문 현

Bohle, H.-G., 2007, Geographische Entwicklungsforschung, in Gebhardt, H. et al.,(Hrsg.), *Geographie - Physische Geographie und Humangeographie*, Spektrum - Akademischer Verlag, Berlin/Heidelberg, 797-815.

Coy, M., 2000, Aufgaben der Geographie für Entwicklungsforschung und Entwicklungs-

politik, in Blotevogel, H.H., Ossenbrügge, J. und Wood, G.(Hrsg.), *Lokal verankert - weltweit vernetzt* (= Tagungsbericht und wissenschaftliche Abhandlungen 52, Deutscher Geographentag Hamburg 1999),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 46-58.

Coy, M., 2005, Geographische Entwicklungsländerforschung, in Schenk, W. et al.(Hrsg.), *Allgemeine Anthropogeographie*, Klett, Stuttgart, 728-765.

Kreutzmann, H., 2002, Theorie und Praxis der Entwicklungsforschung: Einführung zum Themenheft, *Geographosche Helvetica* 58(1), 2-10.

Krüger, F., 2003, Handlungsorientierte Entwicklungsforschung: Trends, Perspektiven, Defizite, *Petermanns Geographische Mitteilungen* 147, 6-15.

Müller-Mahn, D., 2007, Die Auflösung von Norden und Süden: geographische Aspekte der Entwicklungsdebatte, in Gebhardt, H. et al., (Hrsg.), *Geographie - Physische Geographie und Humangeographie*, Spektrum - Akademischer Verlag, Berlin/Heidelberg, 853-867.

Rauch, T., 2009, *Entwicklungspolitik: Theorien, Strategien, Instrumente*, Westermann, Braunschweig.

Scholz, F.(Hrsg.), 1985, *Entwicklungsländer*,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Scholz, F., 2004, *Geographische Entwicklungsforschung - Methoden und Theorien*, Gebrüder Bornstræger Verlagsbuchhandlung, Berlin/ Stuttgart.

Scholz, F., 2006, *Entwicklungsländer - Entwicklungspolitische Grundlagen und regionale Beispiele*, Westermann, Braunschweig.

• 교신 : 안영진(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yjahn@chonnam.ac.kr)

Correspondence: Young-Jin Ahn(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접수: 2009.8.17, 수정: 2009.9.9, 채택: 2009.10.12)